

天安門事態 以後의 中國政情과 韓半島

金 東 成

중앙대 교수

몇일전(9월 16일) AP통신은 홍콩 發 보도를 통해 지난 6월 4일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외교관들과 정보전문가들은 북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한 적이 있다. 심지어 주요인물의 사진이나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을 유심히 관찰하는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해야 楊尙昆 국가 주석과 李鵬 首相이 신는 구두색깔이나 모양을 권력투쟁적 政情과 연관시켜서 현실을 유추할 수 밖에 없을까 하고 동정적 이해를 하고 싶어진다. 그런가하면, 최고실권자 등소평은 하루에도 여러번씩 죽었다. 살아났다가 반복한다. 등의 나이(85才)로 보아 몇일간 잠잠할 때 위독하다는 무책임한 보도를 해도 우연히 맞을 확률은 50%를 넘으니 실제에 관계 없이 건강한 날은 없는 셈이 된다.

한편, 중국의 지도부는 경제체제개혁 추진을 중단하고 계획·통제경제체제로 복귀한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문화혁명기로 복귀하여 이념교육을 강화하면서 계급투쟁의 구호를 내 걸고 있다. 혹은 아니다 등 언론과 전문가들의 상반된 분석이 연일 언론매체에 등장한다. 평소 중국에 관심을 가져온 일반인들의 머리를 혼란시키기에 충분하다. 결국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상대를 정의하는 양상이 目下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 제주신문사 통일문제연구소가 89년 9월 29일 주최한 세미나 발표요지

그러나 이러한 중국政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사회과학자들이 찾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행태적 일관성과 규칙성이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천안문사태라는 정변은 그러한 지경으로 이끈 엄연한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현재의 불안정한 政情은 그 여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안문사태 발생원인에 대한 핵심분석은 비록 현실이 불투명하다해도 향후 역사 전개양식의 커다란 몇가지 줄기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한 연후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시켜 중국의 선택입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 과연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우리 나름의 답을 구해 볼 수 있는 것이니라.

× × ×

1978年末 공산당 제11기 3中全會 이후 10년간에 걸쳐 등소평 리더쉽에 의하여 전개되어온 경제와 정치개혁은 그 이전 10년간의 문화혁명기와 비교할 때, 가히 「혁명적」변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3中全會를 기점으로 등소평 리더쉽은 지난 문화혁명기 동안의 국가와 사회간의 격리, 그리고 민간부문간의 반목과 불신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의 구축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당과 국가의 이름으로 「4개현대화」의 슬로건을 내걸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냈고, 「경제발전」을 논리적 근거로 한 정치구조의 개편과 개혁을 꾀해 나갔던 것이다.

우선 모택동시대의 「정치우선(掛帥)주의」를 「경제제1주의」로 변경시켜 나갔다. 따라서 인민에 대한 이념교육을 완화시키고, 당의 사회 및 경제에 대한 간섭을 축소화시켜 나갔다. 모택동시대를 청산하고 등체제의 정통성을 보강시킨다고 생각될 때까지 지식인과 학생들의 민주화·자유화 주장을 인정하고, 당 스스로 모택동과 모사상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의 절대불변성에 대한 반박을 부추키기 까지 했다. 특히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개방은 물론 자본주의적 경제경영방식의 도입과 운용이 불가피함을 내세우다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아예 「경제체제개혁」의 이름하에 所謂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시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경제체제개혁과 경제발전

정책을 효율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경제제도와 정치과정에 대한 개혁이 뒤 따랐음은 당연하다. 당정 및 정경분리, 분권화·년경화·법치주의 강조, 그리고 지식인 및 전문가 우대정책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경제 및 정치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이 공산당지도부 내의 노선과 과벌대립이 없이 순탄히 진행되어온 것은 아니다. 우선 경제정책에 있어서 계획·통제경제의 지속을 주장하는 보수파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志向을 주장하는 진보파 개혁파 간의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중국내의 더욱 중요한 대립과 논쟁점은 지난 10년간의 체제 개혁과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서 「민주화·자유화」의 개념과 그 한계설정을 둘러싼 의견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민주·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중국 내부에는 3가지 상이한 관점이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범주는 이를 일차적으로 중국의 공산혁명의 역사 과정에 근거한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해온 부류이다. 봉건주의·제국주의 하에서 그리고 국민당치하에서 경험한 수탈과 압제에서 해방되고, 문혁의 인격적 모델로 부터 자존을 되찾은 상태로서의 제도적, 법률적 개선같은 것으로 보는 당의 혁명원로들과 이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보수적 당정관료의 정치문화다.

두번째 부류는 사회주의의 이론적 이상을 신봉하기는 하나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리하고 합리성 그리고 생산성과 복지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 정치권력의 제고를 「민주」로 보면서 이를 위해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해야 하고, 현 정치제도의 과정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는 진보주의적 당정관료와 일반 지식인들의 관점이다.

세번째 부류는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맹목적 수용을 거부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민주를 추구해야 한다는 소위 급진주의적 자유주의 지식인과 많은 학생들에 의한 관점이다.

이러한 3개의 관점은 등소평체제의 출범직후 부터 현실문제에 대한 당의 대처방식 채택과정에서 충돌되어져온 것이다. 중요한 쟁점은 1979년 말과 1986

년 말의 「자유화 시위」가 대표적인데, 등소평 리더쉽은 「견지4항 기본원칙」(당적영도·무산계급독재·사회주의노선·마르크스-레닌-모사상)을 내세워 급진적 자유주의 운동을 제한해 왔었다.

그런데, 앞서 말한 3관점 중, 마지막 관점인 자유주의적 지식인과 학생들의 주의·주장에 대한 반응과 대처양식을 놓고 당지도부가 분열되어 왔음이 주목을 요한다. 첫번째 관점에서 정치경제를 조망하려는 혁명원로 세력에게 있어서 자유주의적 민주화운동과 급진적 경제체제 개혁은 「반동브로조아 악령」의 재현으로 보였다. 이에 반해 두번째 관점을 지닌 진보적 당정관료와 지식인들에게는 용납될 수 있거나 어쩌면 사회발전과정에서 당연히 겪어야 할 모습으로 비춰졌다. 특히 이들 운동속의 주장이 「부패척결」 「언론자유」가 주종을 이루는 상황에 대해서는 호의적 반응까지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리더쉽내부의 대립적 관점속에서도 지난 5월 전까지 노골적인 분열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았던 것은 등소평이 진보적 개혁지향 리더쉽을 지지하면서 혁명원로들의 불만을 견제했고, 그들을 정치일선에서 제2선으로 물러앉도록 조치를 취해 나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든 후, 계속 증대되어온 인플레이션과 부패, 그리고 인민들의 상대적 가치박탈감의 고조는 호요방과 조자양 리더쉽의 입지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었고, 1986년말 「민주화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호요방이 총서기직에서 사임해야 하는 사태를 몰고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5월에 전개된 천안문시위에 임하여 조자양 또한 실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천안문시위에서 주장된 구호 중에는 등소평 1인체제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었는데, 등소평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10년간 당원로들의 눈총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의 개혁과 개방을 가져오도록 개혁과를 두둔해왔던 자기를 능멸하고 나선 것이었으니 학생시위대가 「반동·반혁명분자」로 보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천안문시위 중 조자양과 이붕 간의 의견대립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결국 이붕 수상은 혁명원로의 치마폭에서 자란 행정관료로 현 리더쉽에서 당원로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북경에서의 제엄령 선포와 집행과정, 그리고 천안문시위대간의 알력이 외부로 전달된 것 또한 결국은 당원로에 절대적 충성을 하는 군부와 胡·趙라인의 군부지원세력간의 모호했던 관계를 반영한다. 결국 군사위주적인 등소평이 혁명원로 편에 서고, 조자양을 버림으로써 군은 다시 일원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 × ×

지난 10년간 중공리더쉽은 「견지4항기본원칙」(당적영도·무산계급독재·사회주의노선·마르크스-레닌-모사상)을 내세워 정치와 경제, 그리고 「민주·자유화」와 개혁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당리더쉽 내부에는 이 4개 원칙에 대해서 추호라도 공개적 반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4개 원칙이란 현실정치변동 과정에서의 정도해석에 있어서 모호한 것이고, 실제 「중국적 사회주의」니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니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니 하는 새로운 개념을 공식화하고 발표해 가는 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이 되어온 것도 못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혁명원로와 개혁파간의 권력투쟁 양상으로 化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 이론으로서의 역할인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적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름하에 4개현대화 달성을 위한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의 경제부문에 대한 관료적 지배란 필연적으로 제거되어야만 했었고,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의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경직성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하는 것이고, 인민을 경제발전에 매진토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식보다 개인의 경제적 이해를 북돋아야만 했었다. 따라서 현실적 국가정책과 4개기본원칙 간에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정부패의 만연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갖가지 경제문제가 수반되었던 것이 천안문사건의 전야에 나타났던 현실이었다.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중공은 지난 10년간 정치체제적 한계 속에서 경제발전정책을 펴해 나갔고 스스로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타개방안에 대한 당 리더쉽내의 합의가 결여된 상태하에서 사회변화는 급속화되어 나갔고,

시민의 의식구조는 급변해 나간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과 국가의 이념적 존립근거라는 4개 기본원칙의 준수, 특히 당적영도와 사회주의 노선 및 이념의 쇠퇴를 부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천안문사건이 발생했던 것이고, 혁명원로 및 보수파의 안목으로 보면 이는 당의 존립과 국기를 뒤흔드는 정치적 위기일 수 밖에 없었다. 개인과 국가의 사활이 달린 권력투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당리더쉽내 진보·개혁세력의 정상을 격파해 버렸던 것이다.

× × ×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政情이 혼미스러울 수 밖에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첫째,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공산당 영도력을 재활·강화시켜야 하는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당은 이미 사회 및 경제부문에 있어서 직접적인 통제자역할을 스스로 제한해온 상태이며, 당내의 많은 부분이 지난 10년간 胡·趙 라인하에서 「4개기본원칙」과 같은 교조주의 보다는 실용주의적이고 개혁지향적 자세에 동조 내지 관여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혁명원로와 보수세력에 의한 리더쉽에 절대적 영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내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胡·趙 친근세력을 제거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벌적 구분이 현실적으로 손쉬운 일은 아니고, 계속적인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당연하다.

둘째, 4개현대화를 위한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의 당위성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의 철칙이 되어 있다. 금년 들어 중국경제체제개혁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중국의 전국 노동자의 93%가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새로이 출범한 당적영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경제체제 개혁 및 정책수행과정에서 발생되어온 것으로 단정하는 「정신오염」과 「브르조아 자유화」에 관용을 베풀 수도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개방과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당정 및 정경분리정책에서 후퇴하여 나가야할 입장에 있는 것이다. 금년 봄까지 국가위원회나 각급행정기관 산하의 1/4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에 당세포조직이 해체 되었는데 이제는 이를 다시 부활시켜 나가고 있다고 한다.

세째, 현 중공리더쉽은 특히 이붕 수상에 의해 개혁경제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면서도, 더이상 자유시장경제 추구방향으로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으며, 다시 중앙통제경제정책의 返轉까지를 시사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는 현 경제 현실의 문제점을 타개해야 하는 현 리더쉽의 입장을 시사하는 것이기는 하나, 현실적 실효성에는 커다란 한계와 문제의 악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네째, 현 중공리더쉽은 사상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의 현실에서 다른 방도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북경대학 신입생에 대해 군사학교에서 1년간 정치군사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거나, 대학졸업생 중 상급진학코스를 밟으려면 최소한 1년간 육체노동(공장 혹은 농촌에서)을 받도록 하는 일종의 하방정책이 부활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은 큰 효과가 없음이 최근 중공방문객들을 통해 밖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10년동안에 이데올로기 교육은 폐지되었던 것과 다름이 없는데, 새로히 정치이데올로기 교육을 실시하게 되니 그에 대한 호응은 어쩔 수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그러하 현 리더쉽의 정통성확보를 위한 苦肉之策으로 부패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음은 사실이다. 특히 중앙정부관리들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이미 8월달 현재 148명 기소), 지난 6월 17일에 등소평의 아들(덩푸팡)이 운영해온 전국지사 35개가 폐쇄된 후, 9월 이후부터는 고위 黨·政 관리와 친인척이 기업활동에의 관여를 금지한다는 신화사통신(8월 27일)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 또한 시장경제도입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구조적 성격 때문에 쉬 척결되리란 어려운 것으로 보는게 일반론이다.

이렇듯 혼미스러운 政情下에서 중공은 오는 10월의 당중앙위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의 당중앙위전체회의에서 향후 권력구조와 정치 및 경제정책 노선이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처럼 혁명원로들의

후견체제하에서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띤 당정관료들에 의한 당의 영도방식이 변화하지는 않으리라 보인다. 현 당 총서기인 江澤民은 혁명원로인 李先念의 사위로 알려지고 있고, 나머지 당정치국 상무위원들도 기술관료 출신이 대종을 이루는데, 정치적으로 혁명 원로에 거스리는 처신을 할 인물로 평가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楊尙昆이 군내부에 족벌체제를 이뤄놓고 있다 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앞으로 내세울 정책노선이 과거와 유사하고 화려한 것이 될지는 모르나, 現 政情의 혼미라는 것이 경제발전과 급격하고 전반적 사회변화과정과 중국정치체제가 안고 있는 체제적 한계가 맞물린 결과이기에, 단 시일내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기란 극히 어려울 것 같다. 결국 향후 등소평의 처신과 그의 건강여부에 따라 또 다른 양상의 당리더십내부의 분열과 문제발생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 × ×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政情은 한반도문제, 특히 한중관계에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갖는 것인가?

이미 1980년대 중반기 이후부터 중국을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독립자주」와 「평화공존5원칙」을 유난히 강조해 왔었다. 그런데다 천안문사태가 발생하고, 方勵之 부부의 북경미대사관으로의 망명,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대 중공비난과 일부 제제조치가 연이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평화공존5원칙」중 특히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언론에 연일 강조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특히 최근(9월 10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전국 40주년 기념에 임한 구호를 확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의 주권과 국가적 존엄을 지키고 중국내정에 대한 외국의 여하한 간섭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라 한다. 한편 등소평은 19일 전일본외상 이토 마사요시(伊東正義)와의 대담에서 지난 7월 서방 선진7개국의 천안문사태에 대한 대중국 비난 결의안을 내정간섭이라고 심하게 매도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내정불간섭원칙의 강조는 대내적으로 민족주의감정을 고양시켜 공지에 몰린 중공지도부의 위신을 만회하려는 현실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향후 대외정책 과정에서 이러한 중화주의 요소는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듯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민족주의사조의 팽배는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듯 현 중공 리더십이 북한에 대해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리라는 예측을 어찌면 무모한 것으로 만든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중공은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과 지위에 더욱 예민해질 것 같다. 최근 수년간의 중국의 대한반도정책목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억제와 어느 한 주변강국에 의한 영향력의 독점을 견제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때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함에도 중공의 속마음을 달리 해석하려고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팀스피리트 훈련중단 요구는 북한의 주장에 가식적인 동조라기 보다 현실적 타산 때문이라고 중국관변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외양상의 한반도평화상태만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의 한반도평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한편 천안문사태의 발생전에는 한국과의 경제관계증진에 따른 실리 때문에 중국의 중앙실무선에서 한·중간에 점진적이나마 다각적인 교류방식에 대해 거론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정책실무선의 개개인에 대한 성분조사가 행하여 지고 있어서 과거와 같이 개개인의 진보적 입장표명이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정경분리의 원칙하에서 한중경제교류의 증대를 꾀하려 할 것이고, 정치적 관계의 개선 가능성은 크게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떠한 사람은 천안문사태이후 해외투자자들의 대중국 진출이 줄어들었고 외환사정이 악화상태라서 한국에게는 유리한 현실이 도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또한 경제결정론적 단순논리로써 현실 자료에 근거하고 있지도 못하다. 현 중국의 경제문제는 단순한 해외투자 유치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국

내의 인플레이, 재정필박, 생산성문제, 국내정국의 불안 등 광범위하게 얽힌 문제이다. 한편 외국상의 대중국투자 상담건수와 그 액수는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증대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우리가 과대 평가하는 것은 오류라 하겠다.

이상의 중국현실을 기초로 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민족문제 혹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택할 길은 국제정치적 전략관의 확립없이 무모하게 중국 혹은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남북간의 대화재개와 국내통합이 앞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한미관계의 구조적 변경없이 진정한 한중 혹은 한소관계의 개선이란 탁상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중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내政情이 불안할 때는 항상 호전적이고 경직된 대외관계를 견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비록 오는 10월 당중앙위원회에서 증공은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의 의지를 적극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적 관계에서 진취적이고 탄력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천안문사태와 그후의 중국政情은 우리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보다 전문적 지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政情의 불안정과 보수화 추세는 우리의 대북방 및 전반적 대외관계의 이론적 재정립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하겠다.